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5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가동

전주매일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음 12월 12일) 제390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특별자치도가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에 김인태 도 기업유치실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 '제3 금융거점' 도전장

도,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 공식 제출

자산운용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차별화된 모델 내세워

전북특별자치도가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것은 전국 최초다.

현재 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두 곳뿐으로, 전북이 제3의 금융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중심지 예정 구역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총 3.59㎢다. 도는 이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핵심 금융기관이 입주할 중심업무지구 0.14㎢, 연관 산업과 지원 시설을 배치할 지원업무지구 1.27㎢, 금융 인력의 정주 여건을 조성할 배후주거지구 2.18㎢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자산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 등 전북의 강점 분야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차별화된 금융 모델을 내세웠다.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에 이어 전북 고유의 특화 영역을 구축해 국가 금융산업의 삼각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6월경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도는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치권과 경제계, 도민과 긴밀히 협력해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과 국가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KB금융그룹은 지난 28일 전북혁신도시에 'KB금융타운'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KB증권·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 KB국민은행 비대면 상담 조직 '스타링크', KB손해보험 광역스미트센터가 들어서며, 기존 인력 150여명에 100여명이 추가 배치된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지원이 뒤따른다.

금융기관 유치와 집적화를 위한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신규 채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 지급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전액, 이후 2년간 절반이 감면된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인센티브를 넘어 금융기관 집적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추진은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며 기대를 모았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도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정 신청을 본격화 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전북연구원과 함께 개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약 9개월간 관계 부처와 전문가, 유관기관의 자문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10~11월에는 20일간의 도민 의견 공모, 금융기관·전문가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12월에는 도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전북은 그간 금융도시로서의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글로벌 금융기관 16곳을 유치했고, 전국 최초로 핀테크육성지구를 지정했다. 이전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금융 교육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책도 갖췄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 공인 전략적 금융거점이라는 위상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이 최우선 대상"

민주 이원택 의원, "국가 미래 거점" 정부·여당 지도부에 공식 요구

농식품·에너지·금융·문화 등 50여개 공공기관 전북 이전 제안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대상 지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9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향해 "전북 없이 국가균형발전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존재할 수 없다"며 전북 특화 산업과 직결된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을 공식 요구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5극 3특 균형성장 체계'를 추진하고 있고, 초광역 통합 권역에는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병행되고 있지만, 정작 전북의 역할과 몫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된다면 전북은 또다시 국가 전략의 주변부로 밀려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북이 단순한 '지원 대상 지역'이 아니라 국가 미래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이라는 국가 프로젝트, 농생명수도로서의 집적 기반,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RE100 산업 여건을 동시에 갖춘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며 "재생에너지·물류·농생명·식품·관광·피지컬 AI가 한 공간에서 융합될 수 있는 국책 무대는 전북과 새만금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전북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형 공공기관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지역문화진흥원 등 농식품·에너지·금융·문화 분야 50여 개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을 제안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지역 안배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이전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피지컬AI연구원 설립, 4대 피지컬 AI 실증센터 구축, JIST(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에너지대학원 신설 등을 통해 전북을 미래 산업의 두뇌이자 컨트롤타워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생명수도 전북의 위상 강화를 위한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 등의 이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북을 단순 생산지가 아닌 농생명 정책·연구·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과 문화 분야 이전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이 의원은 전주를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신탁, 각종 공제회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K-컬처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설치와 국립발레단, 지역문화진흥원, 국기원 이전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미래 산업의 두뇌와 정책 컨트롤타워가 전북에 더해지지 않는다면 전북의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역시 또다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균형발전지수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에 명시적인 '최우선 이전 권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광역 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 논의 과정에서도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김민석 총리, 김경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직접 만나 전북과 새만금의 국가적 역할, 그리고 그에 걸맞은 재정·정책적 지위를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원택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전북의 미래 전략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전북에 꼭 맞는 공공 기능과 미래 비전을 끝까지 관철시켜 도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불법 구금으로 억울한 간첩몰이 누명 벗다… 故 신충관씨 '무죄'

경찰의 불법 구금으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어부가 5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은 29일 반공법 위반(찬양·고무 등,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고 신충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 신충관씨는 지난 1973년과 1974년께 납북 어부 신명구씨가 지인들이 말한 "(신명구씨가) 북에 갔는데 대우를 잘해주더라"하는 말을 전해듣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또 다른 주변 지인에게 이같이 전해들은 말을 이어 전달해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군에 입대한 1976년,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군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신씨에 대한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시스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지급대상자		2025년	2026년	증 감
출생 축하금	첫째아	30만원	100만원	+70만원
	둘째아	50만원	100만원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100만원	-
자녀 양육비	셋째아 이상	120만원 (월10만원)	120만원 (월10만원)	